

민주 당권레이스 출발부터 거센 파열음

전준위안 무산에 반발 ‘붓물’
안규백 사퇴...친명계는 연판장
“권역별 득표제 기괴한 룰”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8 전당대회’ 룰 변경을 둘러싼 후폭풍에 신음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남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의 의결안 일부를 뒤집은 것을 두고 곳곳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며 일대 혼란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급기야 안규백 전준위위원장은 이날 위원장직에서 전격 사퇴했고, 일각에서는 비대위의 결정을 되돌리기 위한 연판장까지 돌았다.
무엇보다 비대위가 당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컷오프) 선거인단을 기존대로 중앙위원들이 독식하도록 한 것이 뇌관으로 작용했다.

전날 오전 전준위는 ‘중앙위 100%’였던 예비경선 투표 비중을, ‘중앙위 70%-국민 여론조사 30%’로 변경했으나, 비대위는 이를 원위치시켰다.
비대위의 ‘번복 결정’이 나오자 당내 성토가 빚발쳤다. 주로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앞장섰다.
이 고문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을 비롯한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가 당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마저 훼손하는 결정을 했다”며 비대위의 결정을 되돌리기 위한

‘전당원 투표’를 요구했다.
회견 성명서에는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총 38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우상호 비대위’가 예비경선에 ‘민심’을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은 사실상 이재명 상임고문을 ‘컷오프’ 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중앙위 컷오프 100% 제도는 속의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포장된 계파주의, 여의도 기독교의 산물”이라며 “비대위는 전준위의 ‘30% 국민여론 반영안’을 받으

라”고 요구했다.
다만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당권 주자인 강병원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중앙위는 오랫동안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들을 잘 추려서 국민께 내보이는 기능을 해왔다”면서 “이재명을 컷오프하기 위한 비대위의 결정이라는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친명계 주장과 거리를 뒀다.
비대위가 ‘최고위원 권역별 득표제’를 도입한 것을 두고도 파열음이 잇따랐다.
“당내에서 한 번도 토론해 본 적 없는 이상하고 기괴한 룰”(김남국 의원), “국민적 웃음거리가 될 게 뻔한 제도”(김병욱 의원) 등 친이재명계는 물론 “지역별로 투표를 강제하는 방식은 비민주적”(고민정 의원) 등 비이재명계에서도 일제히 반발했다. /연합뉴스



당대표실 향하는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5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 나가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윤 대통령 “직접 민생 챙긴다”
공공부문 앞장, 위원회 정비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앞으로 제가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의 경우 한 6% 정도 상승했다”며 “공급망 재편,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전세세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물가·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

해 관세와 유류세 인하로 공급 비용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에 공공 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과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을 더 어렵고 더 힘든 분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와 비공개 토론이 이뤄졌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626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많은 전문가가 지적해왔듯이 정부 내 각종 위원회는 책임 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 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며 “각 부처에서도 위원회 정비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민주, 재개발 권한 국토부서 광역시 이관

유류세 최대 70% 인하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토교통부의 재개발 관련 권한을 광역시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9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김성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동네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것은 광역단체장이나 지역자치단체장인데, 재개발 권한을 국토부가 가진 것은 세계적 추세와 너무 다르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동네 단위 재건축을 두고 국토부가 해라, 마라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중앙정부 규제”라며 “지방정부가 도시 특성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훨씬 사리에 맞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 권한을 기초단체장까지 이양하면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어 광역단체장 차원에서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게 사리에 맞는 것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정책위 차원의 부동산 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 발의를 논의하고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당 의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유류세를 최대 70%까지 인하할 수 있게 폭을 넓혀주는 내용의 법 개정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유가 고물가 고통속에 중국 리스크까지 현실화하면 매우 큰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오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라 정부가 여러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된 이들의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억울한 중부세 대상자, 이미 중부세를 부과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환급해주는 게 타당하다”면서 “기획재정부가 억울한 중부세 대상자에게 환급해주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 통제와 중립성 양립해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경찰위 임명 제정 동의안 통과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인 윤희근 경찰청 차장(사진)은 5일 “경찰 권한과 역할이 민주적 통제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과 경찰권의 중립성과 책임성 가치가 존중돼야 한다는 것은 양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경찰청장 임명 제정 동의안이 통과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근 면담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는 물음에 “어떤 소신과 가치관을 갖고 조직을 운영할 것인지, 리더십과 치안 방향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구체적 부분은 행안부의 협의 과정을 거쳐 가면서 최대한 (경찰)의 견이 반영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 명시된 경찰청장 임명 절차에 따라 이날 임시회의에서 윤 차장의 경찰청장 후보자 신분을 확정했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등 법적 절차를 거치면 윤석열 대통령이 윤 차장을 경찰청장으로 최종 임명할 수 있다.
윤 차장은 지난해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근무했으며 치안감을 맡고 반 년도 되지 않아 치안감장으로 초고속 승진한 뒤 경찰청 차장이 됐다.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경찰청장으로 직행하게 됐다. /연합뉴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트 고온소독 살균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